유럽그린딜과 농업부문 전략

최 형 식*

유럽그린딜 계획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을 통하여 기후를 보호하고 저탄소 산업을 육성하는데 선두에 서고자 하는 것이며 농업부문 전략은 그린딜 계획의 중요한 축으로서 농업 생산 및 소비 방식의 전면적인 변화를 통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1 성장전략으로서의 유럽그린딜

■ [주요내용] 유럽연합이 2019년 12월에 발표한 그린딜(Green Deal) 계획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통하여 기후변화를 억제하고 동시에 탄소 중립경제의 선도자(first mover) 역할을 수행하여 경제성장에 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목표를 제시하는 보고서[1]에서는 그린딜 계획을 통한 탄소 중립경제 선도적 역할로 인해 유럽연합이 2% 추가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함.

■ [코로나 이후 유럽 그린딜] 코로나 대 유행 이후에도 그린딜은 경제회복과 녹색 및 디지털 투자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 전략으로서 단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7월 21일 각국 정상들은 유럽정상회의(EU council)에서 사상 최대인 총 2,553조원 EU예산 계획에 합의함.[2]

- 2,553조원 예산은 1,050조원의 코로나 경기회복 예산(Next Generation EU)과 2021-2027 장기재정계획 예산(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1,503조원으로 구성됨.

- 코로나 경기회복 예산은 546조원의 지원금과 504조원의 대출로 구성되며 2021년 첫해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예정임.

- 장기재정계획 예산은 향후 7년간 사용될 것으로 녹색 및 디지털 전환 투자에 집중되며 예산의 30%는 기후보호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녹색기술센터 정책연구부(hyungsik.choi@gtck.re.kr)

1) COM(2018)773 final, "A Clan Planet for all"

2) The European Council,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the-eu-budget/long-term-eu-budget-2021-2027/) (검색일: 20120.08.01.)

유럽그린딜과 농업부문 전략

■ **[분야별 주요 전략]** 총 8가지 부문(기후,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농업, 생물다양성, 환경)에서 기후 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 및 환경 구축을 위한 그린딜 목표를 세우고 3가지 부문(금융, 공정전환, 연구개발 및 혁신)에서 달성 수단을 제시함.

- 2020년 1월 4일 유럽 그린딜 투자 계획 및 공정 전환 메카니즘 발표
- 2020년 3월 4일 유럽 기후법 초안 발표
- 2020년 5월 20일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 구축을 위한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전략" 발표
- 2020년 5월 20일 EU 생물다양성 전략 발표
- 2020년 7월 8일 에너지 시스템 통합 및 수소 전략 채택

| 유럽 그린딜 전략의 부분별 정책 수단들 |

전략 부문	세부지침
기후	기후변화법, 배출권거래제, 토지 및 산림규정, 에너지 효율 지침, 재생에너지 지침, 자동차 CO_2배출 규정
에너지/건물	국가 에너지/기후 계획 평가, 스마트 섹터 통합, "Renovation wave"계획, 유럽 통합 에너지 네트워크 규정 평가, 해양풍력 전략
산업	EU 산업전략, 순환경제, 에너지 다소비 산업분야 탈탄소 전략
수송	스마트 수송전략, 철도 및 수상 운송 확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내연기관 규제
농업	"Farm to Fork" 전략, 농약/항생제/비료 사용 저감을 위한 법률 제정
생물다양성	EU 2030 생물다양성 전략, 생물다양성 감소 대응 방책 마련, EU 산림 전략
환경	지속가능한 화학물 전략, 물·대기·토양 오염 제로 액션 플랜, 대형 산업 단지 오염물 관리 규정 개정

자료: COM(2019) 640 final ANNEX "The European Green Deal"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 **[기후 목표]** 2050년 온실가실 순배출 제로 달성을 위해 기후법(climate law)을 채택하여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무화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기존 90년 대비 40%감축에서 50-55% 목표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며,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를 2023년 1월 1일부터 도입할 예정임.

-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를 기존 발전 및 산업부문에서 교통, 난방, 건물분야로 확대할 예정임.
-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탄소 가격이 미치는 경제 영역을 확대함.
- 유럽 내 높은 온실가스 규제로 인해 유럽 내 기업이 해외로 생산을 이전하여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감축 노력을 수행하지 않는 국가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예정임.



유럽그린딜과 농업부문 전략

■ **[에너지 시스템 통합 및 수소 전략]** 에너지부문은 EU온실가스 배출의 75%를 차지하며 에너지 시스템 통합과 수소는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에너지 부문에서 대규모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코로나 경제 위기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함.

- 에너지 시스템 통합은 에너지 순환(circular) 시스템 구축,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최종 에너지 전력화와 전력화가 어려운 분야에서는 청정 연료(그린 수소[3]), 바이오연료, 바이오가스)를 통해 에너지 전환과 통합을 달성할 것임.

- EU 수소전략에서는 그린 수소 생산과 활용에 중점을 두어 2024년까지 최소 6GW의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전해 그린 수소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100만 톤의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며 2030년에는 40GW의 수전해 그린 수소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1,000만 톤의 그린 수소를 생산할 계획임.

2 유럽그린딜의 농업 전략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 **[주요 내용]** 그린딜에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은 생물다양성 전략과 함께 자연환경과 식량 시스템, 생물다양성의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정립하고 EU의 산업 경쟁력과 자연 회복력을 높이려는 것임.

- 농업은 EU 온실가스 배출의 약 10%를 차지하며, 이중 70%는 축산부문에서 발생함.

- 에너지 시스템과 달리 농업 시스템은 기후 및 생태계와 보다 직접적인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며 기후변화 적응, 농촌지역 균형 개발, 시민 건강, 농식품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문임.

■ **[6가지 부문별 목표]** 전 식량 공급 가치 사슬 중 총 6가지 부문(식품생산, 식량안보, 식품 가공/유통/소매/서비스, 식품 소비, 음식물 쓰레기, 식품 공급망의 안전성)에서 지속가능한 목표와 구조적 시스템 개혁을 제시함.

■ **[식품 생산 부문 세부 목표]** 생산부문은 농업 생산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유기농법 및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여 비료, 농약과 같은 투입 자원을 최적화하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생산 부가가치를 늘리는 것임.

- 탄소 농법을 활용해 토양에 탄소를 저장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고 이에 대해 공동농업정책(CAP)

3)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로부터 생산되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



유럽그린딜과 농업부문 전략

보조금이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녹색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 온실가스 감축을 인증할 수 있는 탄소 회계 시스템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

- 순환 바이오 경제(circular bio-based economy)를 농업 생산시스템에 구축하기 위해 농업 부산물 및 가축 분뇨를 원료로 혐기소화 기술을 활용해 바이오 메탄 및 바이오 비료(bio fertilizer) 생산 확대함.
- 2030년까지 화학 농약 사용과 위험을 50% 줄이고 유해한 농약의 사용과 위험을 50% 줄일 것
- 2030년까지 비료 사용을 최소 20% 줄이고 토양 비옥도(fertility) 손상 없이 영양소 손실을 최소 50% 줄이는 것
- 2030년까지 가축 및 수산양식에 사용되는 항생제 판매(sales)를 50% 줄일 것
- 20303년까지 25%의 농지의 경작 방식을 유기농으로 전환
- 새롭게 제시될 CAP은 환경 목표 준수를 의무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결과 중심적인 모델을 제시하여 환경 목표 달성에 충실한 농민에게 소득을 지원할 것

■ **[농업부문 전환을 위한 이행 전략]** 생산부문 이외에도 유통, 소비, 연구개발,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농업 시스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함. 특히 식품 정보 고도화를 통해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식품 생산 가치사슬의 효율성을 개선함.

- **(식단)** EU에서 약 95만 명이 건강하지 않은 식단으로 인해 사망하기 때문에 보다 건강한 식품, 식물성 식단을 늘려 질병을 줄이고 농업 시스템의 환경 영향 줄임
- **(라벨링)** 식품 라벨링을 표준화하고 의무화하여 지속가능한 식품 라벨링 프레임워크를 제안할 예정이며 이는 영양, 기후,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포함할 것
- **(음식물쓰레기)**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단위에서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소시키고 2023년까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음식물 쓰레기 감축 목표 제시
- **(연구개발과 혁신)** 2027년까지 호라이즌 유럽 과학연구개발 프로그램에서 식품, 바이오경제, 자연 자원, 수산업, 농업 및 환경 분야에 총 14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농장 단위의 전환을 위한 지식 서비스 제공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농업부문 전환을 지원
- **(글로벌 전환)** 제3세계 국가 및 타 국가와 협력하여 글로벌 농업시스템 전환 연합을 구축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지원 및 협력할 예정이며 식품 라벨링 프레임워크를 국제화하여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에 대해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할 계획

유럽그린딜과 농업부문 전략

3 시사점

■ 유럽연합의 그린딜은 단기적으로는 녹색·디지털 산업 투자로 코로나 이후 부진한 경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화하여 저탄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으로 볼 수 있음.

- 유럽연합이 예고한 탄소 국경세는 양자 간 논의를 통해 2021년 말까지 탄소세 적용 방식과 범위에 대해 검토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2023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임.

- 국내에서는 유럽과 그린뉴딜 사업 협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내에 미치는 탄소 국경세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책을 마련한 필요가 있음.

■ 유럽연합의 그린딜은 에너지 산업 관련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농업과 관련한 생물다양성, 친환경 농법, 농식품 가치 사슬 전반의 전환 계획을 제시하여 농업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계획을 마련하였고 농촌 지역과 균형 발전을 도모함.

- 국내 그린뉴딜 계획에서는 농업과 관련한 지속가능성 전략이 제시되지 않아 추후에 농업 시스템 전환 전략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유럽은 농식품 무역에서도 라벨링을 통하여 탄소 배출 및 환경성, 항생제 사용, 동물 복지 수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 국내에서도 지속가능성 기준과 데이터를 구축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함.

참고문헌

European Commission. 2019. “The European Green Deal”.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mmission. 2020. “A hydrogen strategy for a climate-neutral Europe”.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mmission. 2020. “A Farm to Fork Strategy for a fair, healthy and environmentally-friendly food system”. European Commission.